

2025-04-30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5-07호 (2025년 4월 30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5년 4월 14일(월)부터 4월 25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22일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만 담은 원포인트 방식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뿐 아니라,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 민주당은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EU의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기('29년)를 감안하여 공시 최초 시행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코프3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 제외하도록 해 은행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반도체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견차가 있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동향
- Focus 2. 금융위, EU 옴니버스 패키지 대응방안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시행일 논의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 ①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 ② 상임위 의결 법안
- ③ 신규발의 법률안
 - 기업 운영 및 우리사주 관련 법안
 - 벤처기업 운영 및 투자 관련 법안
 - 기업 세제혜택 및 산업지원 관련 법안
 - 금융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 가상자산 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안
 -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
 - 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안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시행]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신규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규정,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 [행정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바로가기](#)

- 정부/공공기관 정책자료
- 정부/공공기관 연구보고서
-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Focus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동향

-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22일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만 담은 원포인트 방식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한편 같은 날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뿐 아니라,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해 활성화하고,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그 외 민주당은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발의 상법 개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2210020 / 2025-04-22 / 법제사법위원회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여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2210044 / 2025-04-22 / 법제사법위원회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함 •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

Focus 2. 금융위, EU 옴니버스 패키지 대응방안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시행일 논의

-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23일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EU의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기('29년)를 감안하여 공시 최초 시행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코프3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

국가	공시기준	공시로드맵	특이사항
EU	19개국에서 CSRD의 자국 법규화 완료, EU 차원에서 공시기준 조정 추진 중	올해부터 상장 대기업 등 대상 CSRD 기반 의무공시 진행중, '29년부터 EU 역외기업 공시 진행 예정	옴니버스 패키지로 시행일 연기 등 규제완화 추진('25.2월 제안)
일본	'25.3월 최종안 발표(스코프3 1년 유예)	'27년부터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중 시총 3조엔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 의무공시(안) 잠정 제시	일본은 대부분 3월말 법인으로, FY26는 '26.4월~'27.3월에 해당
호주	'24.9월 확정(스코프3 1년 유예)	'26년부터 대기업 등 대상 의무공시 예정	대기업 기준: ①임직원 500명 이상, ②연결자산 10억 AUD 이상, ③연결매출 5억 AUD 이상 중 두 개 이상 충족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주요 검토사항

공시범위 및 기준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하여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도입 계획	-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적으로 추진 예정 - 산업기반지표와 내부탄소가격 중 톤당 가격 등은 선택공시 사항으로 반영 예정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기준 발표

관련자료

[보도자료]「ESG 금융추진단」제5차 회의 개최

[바로가기](#)

①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신속처리안건 지정 [220136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전반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정 -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 마련 -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제외한 여야 합의된 핵심 조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22070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부당전가되고있는 보험료 및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토록 규정 - 규정 위반 시 벌금형 부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2201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 -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 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 - 가맹사업자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단체 등록제 도입 - 등록된 가맹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② 상임위 의결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산자위 전체의결 [DD2033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를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 현행법의 '금원(金員)' 용어를 '금품'으로 변경
산자위 전체의결 [DD2033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자인권에 대해서 특허권과 같이 이전청구제도를 도입 -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

법률안	주요 내용
국토위 전체의결 [DD2033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함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차입·사채 발행 및 업무위탁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 -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실사보고서·투자보고서 제출 의무와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공시 관련 사항을 조정 -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보고·공시 의무를 간소화
과방위 전체의결 [DD2033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

③ 신규발의 법률안

기업 운영 및 우리사주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209877 / 2025-04-16 / 정무위원회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켜,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해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2210082 / 2025-04-24 / 기획재정위원회	-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2210083 / 2025-04-24 / 기획재정위원회	-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210084 / 2025-04-24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

벤처기업 운영 및 투자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2209943 / 2025-04-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벤처기업의 요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하고자 함 - 다만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까지 벤처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2210066 / 2025-04-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2209946 / 2025-04-18 / 기획재정위원회	-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 -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

기업 세제혜택 및 산업지원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209970 / 2025-04-21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209903 / 2025-04-17 / 기획재정위원회	-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70만 원 수준으로 7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2209937 / 2025-04-17 /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 -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서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2209814 / 2025-04-15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209899 / 2025-04-17 / 기획재정위원회	- 현행법상 혼성주(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한 주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유사한 소비 형태를 보임 -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 하도록 함

금융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209888 / 2025-04-16 / 정무위원회	•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형의 감면 규정을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1인) 2210110 / 2025-04-25 / 정무위원회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 업무를 할 때,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210111 / 2025-04-25 / 정무위원회	•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의원 등 10인) 2210141 / 2025-04-25 / 정무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독립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

가상자산 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의원 등 10인) 2209816 / 2025-04-15 / 정무위원회	•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종료에 대한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을 종료하려면 1개월 전에 금융위와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이전 및 반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감시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원 규정을 신설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 등 신설/변경/폐지 시 금융위 신고 및 공개 의무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의원 등 10인) 2209857 / 2025-04-16 / 정무위원회	•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도록 함 •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과 제한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의원 등 10인) 2209897 / 2025-04-17 / 정무위원회	• 가상자산거래소가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법률안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209842 / 2025-04-15 /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여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마련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이나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정의 -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손실 전부 또는 일부 보전 행위, 가상자산사업자로 오인케 하는 표시/광고, 손실 보전/이익보장 표시/광고, 수익률 허위/미실현 표시/광고 등을 금지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나 준수사항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209862 / 2025-04-16 / 정무위원회	-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환취권(파산재단에서 분리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2209833 / 2025-04-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나 이용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등 11인) 2209907 / 2025-04-1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역별 재생에너지원 발전과 인근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 - 정부가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 사업에 추가하여 RE100 설비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희의원 등 19인) 2209906 / 2025-04-1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신규법을 제정 -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조성, 입주기업 지원, 연대협력 모델 발굴 등을 지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2210106 / 2025-04-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사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용시설에 세대 내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을 포함 (정유량 밸브 등) - 사업자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그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2209904 / 2025-04-17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 오리지널 약제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고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와 무관한 복제약 제조사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2209963 / 2025-04-18 /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기기 사용 중 환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를 제한하고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 신설 - 공제사업의 가능성, 공제규정 승인, 공제규정 세부내용, 회계분리 의무, 시정명령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계약체결 거부 행위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2209826 / 2025-04-15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2209941 / 2025-04-18 /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210085 / 2025-04-24 / 보건복지위원회	-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에 명시 -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210039 / 2025-04-22 / 국토교통위원회	- 리모델링 실시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 증축형 리모델링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1회로 통합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 기관을 추가로 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2209953 / 2025-04-18 / 국토교통위원회	•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할 경우 해체 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 •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결의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고, 인접 단지 간 결합하는 통합리모델링을 허용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함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	----------------	------------------------	-----------------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의결 및 예고

[시행]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 2025-04-14

대상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4-23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신설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5-04-23

대상 법령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5-04-23
주요 내용	-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을 감점제로 변경 -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

[신규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5-04-23

대상 법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일자	2026-04-24
주요 내용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 2025-04-14

대상 법령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
예고 기간	2025-04-14 ~ 2025-05-26
주요 내용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5%에서 15%로 완화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 •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

[입법예고]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규정,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 2025-04-24

대상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2025-04-24 ~ 2025-06-04
주요 내용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규정 •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여야 하며, 게임사의 보고 의무와 게임물 표시 의무 이행을 대리

[행정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5-04-17

대상 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예고 기간	2025-04-17 ~ 2025-05-08
주요 내용	•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하여 하도급법을 적용 - 국외법인 설립이 원사업자의 요청·지시에 따른 경우 - 국내에서 이미 기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 원사업자가 계약 이행·관리·감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경우 - 거래 방식이 국내 하도급거래와 유사한 경우

정부/공공기관 정책 자료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자문단' 출범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4-17

- 「디지털포용법」은 정보격차 해소 위주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위 법령 자문단은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되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영향평가, 디지털역량 교육,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기업 영향: 시사점과 지역의 대응 방안 [바로가기](#)

산업연구원 / 2025-03-31

-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영향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산업안전보건 인력을 약 20.5% 증가시키고 관리감독자 선임을 4%p 늘리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비용 지출 증가는 기업의 ESG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영향기업들은 동법 도입 이후 E(환경), S(사회) 관련 점수가 각각 5.2점, 3.9점 하락하는 등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율의 유의미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2025-04-23

-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에는 1%대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더딘 상황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까지 더해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FDI 세제지원의 개선방향은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외국인투자 수요를 고려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주제	주최	일시 및 장소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	김정재 의원실	4.29 (화) 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우리나라 ODA의 성과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김영배 의원실 국제개발컨설팅협회	4.29 (화)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고동진·김은혜 의원실	4.29 (화) 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서천호·김장겸·임종득 의원실 외	4.29 (화)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	김성원 의원실 외	4.29 (화)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4.30 (수)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투명한 임금 공시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신장식 의원실 외	4.30 (수) 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에너지 대응전략	곽상언 의원실, 아주경제	4.30 (수)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입법지원팀 ●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세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